

애덤 스미스: 식민지 정책과 경제발전*

김 광 수**

논문초록

스미스 이론체계 내에서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식민지 문제는 이론적·역사적 의의를 지닌 중요한 담론이다. 본 연구는 스미스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운영원리로서 경제원리를 포함하는 폭넓은 사회과학자적 시각을 견지하였으며, 이는 식민지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 분석 틀로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미스는 사회경제적 후생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법과 경제를 통합된 체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치적·법률적 과정 및 내용, 더 나아가 윤리규범과 이를 반영한 사회적 가치의 수준, 또는 문화적 요인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자본축적, 분업, 기술진보 등 공급측 요인들과 일부 수요요인이 작용하여 성장의 선순환을 돕지만, 동시에 도덕감정의 작용에 의해 지지되는 정의와 자유, 안전, 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국가실정법의 운용에서 법원리로서 구현될 때 경제성과와 사회적 후생은 개선된다고 본다. 스미스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과 경제발전이론체계에 입각하여 18세기 식민지통치와 정책에 관한 분석, 비판, 대안제시 부분을 심도 있게 고찰한다. 이러한 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초중반에 걸쳐 조선의 멸망과 일본의 강압적 식민지 지배를 겪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경로와 내용을 해석·평가하는데 유효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애덤 스미스, 식민지정책, 경제발전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31, H10, K10

투고 일자: 2011. 2. 28. 심사 및 수정 일자: 2011. 3. 15. 게재 확정 일자: 2011. 4. 27.

* 이 논문은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7-B00071). 소중한 논평을 주신 여러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glaskim@skku.edu

I. 머리말

1776년 3월 『국부론』이 출간된 지 4개월 후에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스미스는 동 저서의 간행을 예정 기일로부터 3년 동안이나 연기한 채 런던에 체류하면서, 영국과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전쟁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할 정도로 식민지 문제(colonial problem)는 그의 주요 관심사(분량으로 볼 때 동서의 제 4편 3분의 1이 이 부분에 할애됨)였다. 공시적 관점에서 볼 때, 실상 영국에서 식민지 문제는 (국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여론주도층 간에 논쟁적 성격이 치열했던 역사적 담론이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스미스에게 있어서 식민지 문제의 중요성은 자신이 세우려고 했던 사회과학 이론체계의 내용과 그 역사적 검증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문제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중상주의체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이론체계를 동시대의 이슈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사례였다.

이처럼 스미스의 이론체계에서 식민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본다면 많은 연구들이 이 주제를 간과할 수 없었음은 당연하다.¹⁾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선행연구는 Stevens(1975), Coats(1975), Winch(1978), Skinner(1996) 등이다. Stevens(1975)는 1770년대 중반 영국과 북미 식민지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식민지 문제에 관하여 당시 여론주도층들이 개진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한 후, 정치경제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스미스의 이상주의적 대안은 제국(帝國)의 형성을 위한 합병(union)이었음을 밝힌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타산보다는 정치적 예측관계로부터의 탈피가 당시 식민지의 주도적 여론이었기 때문에 모국에 대한 저항과 독립이 선포되었으며, 이 같은 북미 식민지의 상황 전개에 관한 스미스의 큰 관심은 자신이 제시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예증하는 모델인 데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짓는다. Coats(1975)는 스미스의 중상주의적 체계에 대한 비판 또는 그 맥락 속에 내포된 식민지 문제에 관한 검토를 통상적인 접근법인 경제학적 관점 이외에도, 역사이론과 사회경제적 발전단계론 및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아이디어와 사실 등과 결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발전단계론에 따라 역

1) 예컨대, Nicholson(1909), Benians(1925), Koebner(1961), Winch(1965) 등은 식민지문제와 제시된 상반된 해법에 관한 스미스의 의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적으로 상업과 정부통치 및 문명 발전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인식했지만, 동시에 사익에 함몰된 특정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과 타협에 따른 정부통치의 중립성에 회의적이었다. 독점과 중상주의, 식민지통치의 내용과 유형에 관한 스미스의 다양한 비판은 이상과 같은 통합적 시각에서 이해 가능하다. Winch(1978) 및 Skinner(1996) 역시 주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북미 식민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중상주의적 정책, 더 나아가서 정치학(politics)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스미스의 신랄한 중상주의 비판과 국가정체적 차원에서의 모국-식민지 합병 제안의 논거는 (자본의 생산성 차이에 관한 명제를 전제로 한) 자연적 진보론 등 경제이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시 영국 정치현안인 식민지쟁탈전과 식민지 과세문제, 당쟁과 정파이익 추구 등에 관한 답을 구하는 정치적 목적과 정치학자의 관점으로부터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스미스가 단순한 경제학자보다는 정치경제학자로서 당시 정치적·경제적 현안을 취급하고, 또한 역사이론과 윤리적 관점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등 소위 통섭형의 사회과학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제시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식민지 관련 연구들은 사회운영원리의 탐구와 관련된 스미스의 학문체계에서 하나의 통일된 분석체계로서의 ‘법’과 경제(法經濟), 그리고 더 나아가 핵심적인 법제도 운용원칙 및 그 가치규범의 이면에 존재하는 윤리학적 토대, 또한 이를 반영한 문화적 요인 등이 식민지에 관한 분석에서 주요 분석 틀로서 통합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논지를 전개하지는 못하였다.²⁾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식민지통치와 정책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스미스의 이론적·실증적 평가가 어떠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 사회문화, 국가 법제도, 경제활동 등 사회분석에 관한 여러 차원의 이론들에 근거하고 있는 스미스의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고찰한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국가(통치)론에서 제시된 주요 가치규범들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제Ⅲ장에서 유럽의 식민지 문제에 관한 스미스의 논의를 기술할 것이다. 식민지경영의 역사, 중상주의와 식민지정책 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제

2) Haakonssen(1981)은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에서 자연법학적 관점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예컨대, Werhane(1991), Muller(1993), Evensky(2005) 등은 스미스의 도덕철학의 비전이 사회, 국가, 경제의 문제를 역사적·진화적 상호작용의 틀 속에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IV장에서 식민지경영과 경제성장에 관한 스미스의 논의를 식민지와 식민모국 각각에 대해 기술한다. 제V장에서는 이상의 경제발전에 관한 이론체계 그리고 식민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세 가지 유형의 사례 분석을 시도한다. 영국의 두 식민지와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식민지경영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에 관한 분석이 사회과학적 이론체계의 적용이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제VI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현대의 식민지시대 역사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스미스의 경제발전 이론체계

부의 진보의 원인에 대한 탐구,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과정을 조명하는 스미스의 경제발전 일반이론은 경제영역뿐만이 아니라, 법과 정치, 사회윤리·문화의 영역에서 제시된 이론들이 하위이론으로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 즉 스미스에게 있어서 부의 진보는 다차원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인식된다. 그 이론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예컨대, Evensky, 2005; Kim, 2009).

첫째, 경제발전이론의 제1의 원리는 인간의 내적 운동원리라고 파악할 수 있는 몇몇 인간행동의 가설에서 구해진다. 스미스는 경제활동 및 부의 축적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인간행동의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교환성향과 개인의 이기심, 좀 더 엄밀하게는 생활조건 개선 심리(이기심의 하위 유형)를 들고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거래하고 교환하는 성향”(Smith, 1776, p. 25)이 사회적 분업과 전문화를 도모하게 하며, 또한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욕망”(Smith, 1776, p. 341)은 끊임없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생활상태를 개선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 사회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규범의 기원이 되는 동감(Smith, 1759)은 사회적 차원에서 주요한 인간행동원리에 속한다.

둘째, 경제학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성과를 좌우하고 경제진보를 촉진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분업과 전문화에서 구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업이론은 생산력 증대 및 시장규모의 확대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발전의 하위이론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부론』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스미스의 분업이론은 생활자료를 초과하는 스톡이 축적되면서 분업을 촉진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같은 단계가 성숙되는 과정에

서 분업은 시장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시킨다. 이는 공급측면에서 기술진보, 생산성 향상, 임금상승을 수반하는 동시에 수요측면에서 소득을 늘리고 상품수요를 증대시키며 장기적으로 인구증가를 초래하는 현상으로 귀결된다. 이로 인하여 자본 축적과 분업은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

셋째, 분업과 교환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경제활동과 그 결과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구 또는 국가에 의해 정의되고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이다. 스미스는 국가의 정치적 활동 그리고 법제도의 운용방식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제약 또는 유인하는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적 성과에 불가결한 영향을 준다고 본다. 국가가 운영하는 법과 제도는 사회적 질서유지의 근간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권력자의 사익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하여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커다란 거래비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가 법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스미스가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회적 가치는 정의,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대변하는 자유, 안전, 평등의 원칙들이다.³⁾ 이 원칙들이 합당하게 관철되면 한 국가의 경제성과는 향상되고 사회적 후생은 증진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제 진보는 난관에 봉착하거나 종종 정체 또는 퇴보를 겪기도 한다. 한편 스미스의 윤리이론은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덕목과 가치의 기원 및 변화를 동감의 본능에 의해 설명하고 역사적으로 법제도체계의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일단의 사회문화적 조건(협력, 정의, 공정성, 상호성, 신뢰, 비공식적·사회적 학습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⁴⁾ 방금 거론된 네 가지 사회적 가치 또는 법규범 원칙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김광수, 2009, 2010).

첫 번째, 모든 국가 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의 원칙의 구현과 관련된 다음의 기술은 법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 간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가장 명확히 표현하

3) 스미스의 직접적 표현에 의하면,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계층의 최고도의 번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증하는 매우 단순한 비밀이다”(Smith, 1776, p. 669). 스미스의 정의론에 관한 대표 연구는 윤리-법제도의 관계를 분석한 Campbell (1971), Haakonssen(1981)이며, 이후 윤리 및 법과 경제에 관한 연구는 Campbell(1984), Malloy(1988, 1994), Posner(1994), Lieberman(2006), Young(2007) 등에서 찾을 수 있다.

4) 문화와 경제성과와의 연관성에 관한 근자의 폭넓은 논의는 Guiso *et al.* (2006)이다. Bruni and Sugden(2000), Evensky(2001), Wight(2009) 등은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에서 공정성, 상호성, 신뢰, 협력 등의 도덕규범과 사회적 가치는 『국부론』에서 논의한 경제활동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확인한다.

고 있다. 스미스에 따르면, “정의(正義)의 조직적 집행이 시행되지 않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상업과 제조업이 장기적으로 번성한다는 일은 거의 발생할 수 없다”(Smith, 1776, p. 910). 이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보장되면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지닌 “생활개선의 성향”이 작용하여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시도하는 데서 비롯된다(Smith, 1776, p. 345, p. 405, p. 540, p. 610). 그러므로 국가법제도의 운용에서 정의의 원칙의 구현은 한 국가가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선행 요건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국가의 법체계가 보장하는 자유의 원칙과 경제적 성과 간에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타인에게 침해할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자유의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발하기 때문에 제도의 틀 내에서 개인 간 경쟁이 전개·심화된다. 그리고 경쟁의 작용을 통해 거래시장에서는 당사자 간 자발적 교환을 촉진시켜 시장가격과 자연가격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경제활동의 자유는 정태적 균형을 통한 효율성 개선뿐 아니라, 경쟁을 통해 분업과 기술진보를 촉진시키고 시장수요를 늘려서 장기적·동태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본다(Smith, 1776, p. 748).⁵⁾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적 진보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법제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은 경제성장을 창출해 왔다는 스미스의 강력한 주장의 이면에는 이상과 같은 자유의 권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Smith, 1776, p. 540).⁶⁾

세 번째, 국가통치의 원칙으로서의 안전보장과 경제성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체 및 명예에 대한 위해, 치안의 부재,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안전보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어떤 경우든 자기통제를 하

5) Richardson(1975), Reid(1987), Negishi(2004), Rothschild and Sen(2006) 등의 스미스 관련 연구는 정태적이 아닌 진화적 관점이 스미스의 경쟁에 관한 접근법이며, 여기서 경쟁은 수확체증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적한다.

6) Goodacre(2010), Brown(2010)은 스미스가 사회적 후생 진보를 위한 핵심원리로서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안인 노예제와 식민지문제에 관한 논의 등을 살펴볼 때 ‘세계 시민의 보편적 관점’보다는 한 국가의 이익을 형량하고 우선시하는 소시민적 관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주의적 관점 및 18세기의 계몽주의의 한계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스미스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들을 고찰하기 위해 일반 이론체계를 제시하려고 시도했으며, 각주 7의 연구자들이 주장한 바대로 역사적 진보와 더불어 자유의 체계는 점진적으로 구현되어 간다고 확신했다.

게 되며 경제활동에서도 적극적인 수행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법제도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면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생산적 자원개발 노력이 충만하게 되고, 안전이 결여되면 최소한의 생존활동에 국한함으로써 경제적 진보를 이루기 어렵다. “[부의 진보가 지체되는] 또 다른 원인은 시민정부의 속성에 있다. 자주 지적되는 것처럼 사회의 초기에는 명백히도 정부가 약하고 무력했으며, 오랜 시간이 경과해서야 정부의 권위가 이웃들의 약탈로부터 개인의 근면을 보호해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근면의 의지를 상실한다. ... 부의 진보를 저해하는 요인 중 이보다 더한 장애물은 없다”(Smith, 1978, p. 522).

마지막으로, 국가 법제도가 견지해야 하는 대우의 평등의 원칙과 경제적 성과와의 연관성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법제도가 허용하고 보호하는 자유와 안전의 권리가 권력자 내지는 소수 특수계층에게만 부여된다면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 참가자, 모든 노동자의 근로의욕, 근면, 창의적 생산활동을 자극할 수 없다.⁷⁾ 두 변수 간의 이러한 긴밀한 상관관계는 유럽의 경제사에서 근대 초 후진국 영국의 16세기 말 이후 경제적 부상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스미스는 당시 유럽에서 영국의 보다 빠른 경제성장의 원인을 법률이 허용한 자유의 권리가 많았다는 점에서 구하면서도, 그 같은 경제성과의 보다 중요한 원인은 영국 법제도가 구현한 평등성 존중에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Smith, 1776, pp. 584-585, pp. 572-575 참고).

Ⅲ. 유럽과 식민지 문제: 역사, 중상주의, 식민지정책

1. 고대 유럽의 식민지 문제

스미스에 따르면 고대 서양의 그리스와 로마에서 식민지의 건설은 영토가 유지할

7) 스미스가 역사상 존재하는 생존양식(수렵채취, 목축, 농업사회 등) 가운데 부분적인 폐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사회로의 이행을 사회진보로서 간주한 이유는 부와 분배의 개선에 의해 유력자에 대한 예측으로부터의 탈피, 권력의 분산과 자유·안전·평등의 진전, 도덕성의 고양이라는 데에 있다. Danford(1980), Berry(1989), Salter(1992), Rothschild(2001), Rasmussen(2006)을 보라.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유민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고대 그리스의 모든 국가들은 아주 작은 영토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잉인구가 발생했을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려는 동기와 효용성을 지녔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 분쟁과 충돌이 빈번했던 인근 도시 지역보다는) 문명의 측면에서 다소 미개하며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식민지 건설을 시도하였다. 고대 로마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초기 농지법에 근거한 공유지 분배로부터 벗어나서 토지소유의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로 인하여 선거권을 지닌 자유민이 가지는 불만 해소 및 분배의 형평성 완화를 위해 주변 정복 지역에 정착을 권장한 데서 식민지가 등장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들은 모국의 도시들과 견주는 수준이거나 능가할 정도로 부, 학문, 예술에서 앞서 나갔다. 스미스에 의하면, 이는 식민지 영토에 거주하던 미개하고 야만적인 원주민들이 문명에서 앞선 이주자들에게 쉽게 복종한 점에 기인한다. 동시에 “그 식민지들은 양질의 토지를 풍부하게 소유했고, 모국으로부터 거의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식민지 주민]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제반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다”(Smith, 1776, p. 567) 고 하여, 토지자원의 우수성과 자립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치적 독립을 중시한다. 반면, 로마의 식민지들은 그리스 식민지와 비교할 때 급속한 성장을 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는 인근 정복지에 문명 수준이 비슷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서 이주자에게 분배된 토지가 일반적으로 매우 적었으며, 무엇보다 식민지가 모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된 상태가 아닌 관계로 식민지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약이 컸던 점 때문이다(Smith, 1776, p. 567).

2. 근대 유럽의 중상주의와 식민지정책

고대 유럽의 식민지 건설과 대비해 볼 때, 근대 유럽의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동기와 효용성에 의해 사전 기획되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모험심, 무역동기, 금에 대한 열망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동인도 및 아메리카 항로 개척이 이루어졌고, 중남미 금은 광산 발견에 의해 아메리카의 정복과 식민이 이루어지면서 식민지 문제가 비로소 전개되기 시작했다. 근대 초기에는 강력한 해상권을 쥐고 있었던 스페인이 아메리카의 유럽 식민지 건설을 주도했으나, 16세기 말에 스페인 세력이 해상

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대서양에 항구를 가졌던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이 비로소 진전되었다. 또한 식민 초기 독점 상인회사에 의한 지역적 정부통치가 빈번했지만 유럽 국가들의 개입으로 점차 폐지되었고, 또한 양질의 풍부한 토지의 존재와 유럽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 식민지의 경우에 경제발전과 번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관한 스미스의 평가는 매우 냉철하다.⁸⁾ 상인회사에 의한 식민지 통치가 식민모국 정부의 개입에 의해 다소 변화하고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과 연관된 여러 원리들과는 상반되는 식민지 규제와 개입은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먼저 식민지 정책 내용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식민모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예측된 식민지관계(colonial relationship)가 원천적, 궁극적으로 식민지 규제정책 일반을 태동시키고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식민모국의 개입주의 정책의 시행과 그 독점적 경향은 근본적으로 자치와 독립성이 결여된 식민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점은 식민지 종속의 주요한 상징이며, 그러한 종속관계로부터 지금까지 거둬들인 유일한 과실이다”(Smith, 1776, pp. 614-615) 라고 요약하여 기술한다.

여기서 스미스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당시 식민모국의 정부가 자국의 중상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식민지 정책을 전개해 나갔다는 것이다. 스미스에게 있어서 중상주의는 “부는 금은에 있다는 원리와, 귀금속은 오직 무역차익에 의하거나 수입(輸入) 보다는 보다 큰 가치를 수출함으로써 광산이 없는 나라로 유입된다는 원리”(Smith, 1776, p. 450)를 경제정책의 목적으로 하는 체계라고 인식된다. 이 같은 중상주의 정책을 식민지정책으로 확장하는 이면에는 마찬가지로 독점권과 폭리를 노린 상인과 제조업자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작용했다.⁹⁾ 즉, 식민지관계와 특성을

8) 그러므로 스미스는 다음처럼 기술한다. “유럽의 정책에는 아메리카 식민지의 최초의 건설에 있어서든, 식민지 통치 이후의 식민지의 번영에 있어서든 자량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망상과 불의가 식민지 건설이라는 최초의 계획사업을 지배하고 지휘한 원리였다고 판단된다. 금은 광산을 찾아다니는 망상과, 유럽 국민들을 해치기에는커녕 최초의 모험가들을 매우 친절하게 환대했던 순진한 원주민들이 사는 나라의 소유물을 약탈한 불의가 바로 그것이다”(Smith, 1776, p. 588).

9) 스미스는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독점근성은 보편적이라고 본다. “인류의 지배자들의 폭력과 불의는 인간사의 특성상 치유하기가 매우 어려운, 오래된 악이다. 그러나 인류의 지배자도 아니고 또한 되어서도 안 되는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비열한 탐욕과 독점근성은 쉽게 방지될 수 없다. ... 무역차액주의를 최초로 발명하고 전파한 것이 이러한 독점근성이라는 것은 의심할

이용하여 식민모국의 상인과 제조업자들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독점지향적인 정책이 자국 식민지에도 관철되도록 유인하였다. 스미스에 따르면, “식민지 건설이 완성되고 모국의 관심을 끌 정도로 중요한 위상을 지니게 되었을 때, 모국이 식민지에 대하여 시행했던 최초의 규제는 언제나 식민지무역의 독점을 확보하고, 식민지의 판로를 한정하며, 식민지를 희생하여 모국시장을 확장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식민지의 번영을 촉진하고 도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둔화시키고 억제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Smith, 1776, p. 590). 근대 초기 식민지관계와 중상주의적 정책에 따라 많은 식민지 산품의 대유럽수출과 유럽 산품의 대식민지 수입(輸入)은 이처럼 정치적 권력관계에 의해 규정되었다.

둘째, 식민지 규제정책, 특히 식민지 산품의 수출에 대한 규제정책은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식민모국의 방위 관련 법률의 시행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예컨대, 1651년에 만들어진 영국의 항해조례 및 관련법(Navigation Acts)은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역 및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했다. 그 법령의 구체적 내용은 대영 제국 영토간의 해운 및 원양어업 산품의 영국 영토로의 반입을 영국 선박이 독점적으로 행하게 함으로써 평시에 상당한 정도의 해운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쟁발발 등의 유사시에는 해군력으로 전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Smith, 1776, pp. 463-465). 그런데 항해조례 및 관련 법령들은 모국 영국에 수출할 수 있는 식민지의 산품을 직접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무역자유에 대한 규제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항해법 관련 규제정책은 낮은 발전단계의 식민지에서 제한적인 부정적 효과를 지니지만, 산업구조가 보다 고도화하는 단계에서 식민지의 수출산품이 정상적인 가치대로 판매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식민지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창출한다고 보았다.¹⁰⁾

바 없다. ... 거주민들에게 자신들 이외의 다른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동업조합원의 이익이 되듯이, 국내시장의 독점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익이다”(Smith, 1776, pp. 493-494).

- 10) 이러한 효과에 대해 스미스는 항해법과 교역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는 식민지에 그리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향후 북미 식민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Smith, 1776, p. 582). 경제사가들의 실증적 연구결과는 이러한 스미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당시 항해법령의 북미 식민지의 경제 후생에 관한 영향은 식민지 소득 전체의 3% 미만일 정도로 극히 적었다고 한다(예컨대, McClelland, 1969; North, 1966).

셋째, 식민지의 중상주의적 규제정책 중 가장 특기할만한 정책은 식민지에서 정교한 제조품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이었다. 식민모국은 중상주의적 원리에 입각하여 국내공업의 원료비 인하, 완성품의 수입(輸入) 저지 및 수출증대를 위해 원료, 기계, 기술의 수출입에 대한 총체적 규제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는 식민지에서 가공제조업이 성장하고 번영할 기회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영국의 북미 식민지의 경우 가내 수공업이나 원료가 되는 제품은 생산을 장려했으나, 모국의 완성 제조품과 경합할 수 있는 고도의 정교한 제조업이 성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억압하였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다음처럼 기술한다. “식민지무역에 대해 영국이 보여주는 관대함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있거나 제조의 초기 단계에 있는 식민지 생산물 시장에 국한되었다. 영국의 상인과 제조업자는 식민지 생산물 중에서 보다 정교하거나 가공된 제조품을 독점적으로 확보해 두려고 했으며, 입법부를 설득하여 때로는 높은 세금의 부과로 또 때로는 절대적인 금지를 통해 그러한 제조업이 식민지에서 설립되는 것을 막았다”(Smith, 1776, p. 581). 당시 영국의 북미 식민지에서는 사탕산업, 제강 및 강재 절단업, 모자, 양모, 모직물 제조품을 포함하는 모직물 공업 등이 당시 대표적인 정교품 제조업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규제대상이 되었다.¹¹⁾

IV. 식민지 통치와 경제성과

1. 문명국과 식민지경영

스미스는 일반적으로 문명국에 의해 식민지가 건설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첫째, 환경에 대한

11) 스미스는 정교한 제조품 규제 및 모자, 양모, 모직물의 타주 운송금지 등에 대해 다음처럼 기술한다. “영국은 아메리카산 선철과 봉철에 대해 그와 유사한 상품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輸入) 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시킴으로써 그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데 반해, 아메리카 식민지의 어느 곳에서도 제강소와 강재절단공장의 건설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 영국은 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모자, 양모, 모직물을 수로를 통해서만 물론 말, 마차에 의해 육로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이 규정은 원격지 판매를 위한 제조업의 설립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식민지 산업을 가족의 생활상 목적이나 또는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조잡한 가내수공업에 한정시킨다”(Smith, 1776, p. 582).

설명력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지식체계의 특성과 관련된다. 불모지 또는 야만국의 자연적인 발전 속도 및 정도에 따라서 보유하게 될 지식의 양과 질과 비교해 볼 때, 문명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전수된 우월한 지식체계의 존재는 훨씬 빠르게 식민지의 발전에 기여한다(Smith, 1776, p.590). 둘째, 사회적 생산력의 토대가 되는 요인 중에 국민의 덕성과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 비추어, 문명국에서 유입된 복종의 습관은 조직과 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 셋째, 문명국의 선진화된 법체계의 도입은 질서 유지와 정의의 체계 정립에 크게 유리하다. 넷째, 자연환경 및 제도적 여건이다. 거주자가 거의 없던 영토에 식민지가 건설되는 경우에는 토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유리하며, 동시에 제도적으로 지대와 조세가 적어서 경제활동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작동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문명국의 식민지는 ... 다른 어떤 인간사회보다 더 빨리 부강하게 된다. 식민지 이주민은 미개 야만민족들 사이에서 여러 세기 동안 저절로 발달할 수 있는 것보다 우수한 농업과 그 외의 유용한 수공업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또 그들은 복종의 습관, 본국에서 이루어진 질서정연한 통치와 그것을 지탱해 주는 법체계, 균형 잡힌 사법행정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가며, 새로운 정착지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건설한다. 그러나 미개 야만민족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과 통치가 확립된 이후에도, 법과 통치의 자연적인 진보는 산업의 자연적인 진보보다 훨씬 더디다. 모든 식민지 이주자들은 자신이 경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를 획득한다. 그가 지불해야 할 지대도 없으며 세금도 거의 없다”(Smith, 1776, pp.564-565). 다섯째, 인적 자원의 측면으로서 스미스는 식민모국이 식민지건설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탁월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지닌 지도자들을 교육시키고 배출한 점에 있다고 본다. “유럽의 정책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최초의 건설이나 현재의 웅대함에 어떤 방식으로 공헌했는가? 그것은 하나의 방식,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만 큰 기여를 했다. ... 유럽의 정책은 위대한 행동을 완수하고 대제국의 토대를 닦을 수 있는 사람을 낳고 길렀다.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실제로 육성했던 정책을 전개했던 곳은 유럽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식민지는 유럽의 정책 덕분에 활동적이고 기업가적인 창설자가 지닌 교육과 훌륭한 식견에 의해 혜택을 입었다”(Smith, 1776, p.590). 여섯째, 스미스가 이론적으로 중시하는 경제적 관점으로서, 식민지의 건설은 모국과의 거래 및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유익하

다.¹²⁾ “우리는 식민지무역의 결과와 식민지무역 독점의 결과를 신중하게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항상 그리고 반드시 유익하지만, 후자는 항상 그리고 반드시 유해하다. 그러나 식민지무역은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의 독점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매우 유익하다. 물론 독점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이익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Smith, 1776, pp. 607-608).

2. 근대 유럽 식민지의 성과

지금 지적된 바대로, 스미스는 문명국에 의한 식민지 건설이 식민지에 가져다줄 수 있는 몇 가지 일반론적인 성과와 유용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제발전 이론체계를 중심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근대 유럽에 의한 식민지건설이 실제로 그와 같은 바람직한 경제적 성과를 수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¹³⁾

첫째, 모국-식민지 관계를 시장의 상호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래 당사자들 간에 경제적 순이익이 발생한다. 식민지의 입장에서 볼 때, 모국 또는 모국이 위치한 대륙 및 세계 다른 지역의 식민지 간의 거래의 확대에 말미암아, 즉 시장거래 확대에 따른 무역 관련 이익의 향수로 인하여 식민지는 농업에 있어서 빠른 발전을 향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식민지체제 건설은 일차적으로 상호 교역을 증진시킴으로써 당시 유럽의 시장 활성화와 국부증진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 스미스는 근세 초기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 경영을 시도한 것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등의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와 직접 거래하지 않은 독일의 몇몇 도시의 경우에도 중계무역을 통

12) 다음을 보라. “열거품과 비열거품 모두에 걸쳐 가장 완벽한 무역의 자유가 영국령 아메리카 식민지와 서인도 사이의 거래에 허용되었다. 그러한 식민지들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식민지는 다른 식민지에서 자신의 생산물을 매매할 수 있는 크고 광대한 시장을 얻는다. 그 시장들이 모두 합해지면, 서로의 생산물을 매매할 수 있는 커다란 내부시장이 형성된다”(Smith, 1776, p. 580).

13) 19세기 들어서서 경제학계에서 맬서스, 벤담과 제임스 밀은 식민지경영이 주는 성과에 대해 스미스의 견해에 동의했지만, 대조적으로 시니어, 토렌스, 존 스튜어트 밀 등은 식민지통치가 식민지에 가져다주는 문명화, 평화, 번영의 관점에서 식민지화를 지지했다(예컨대, Pullen, 1994; Bell, 2010).

해 자국 생산물을 식민지로 보낼 수 있었고, 아메리카와 어떠한 교역관계가 없던 폴란드와 같은 국가의 경우에도 식민지와의 교역으로 혜택을 입은 유럽 국가들과 교역함으로써 식민지 건설은 궁극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유럽 시장에 유입된 아메리카의 새로운 상품들은 넓은 시장을 형성시켰으며, 반면 아메리카는 유럽의 잉여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넓은 시장과 수요처가 됨으로써 유럽 대륙에서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Smith, 1776, pp. 591-592).

둘째, 식민지관계에 의해 형성된 시장의 확대를 통해 상호 이익이 도모된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법률적 관점에서 평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스미스에 따르면, 식민모국의 정치·군사·경제력의 제고를 목적으로 전개된 식민지 규제정책은 일반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신성한 법률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궁극적·장기적으로 식민지의 경제발전을 해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식민지 규제정책이 스미스에게 있어서 정의(正義)의 체계의 침해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식민지 규제정책은 사람들이 자연인으로서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자연권(自然權)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스미스는 『법학강의』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자신(自身)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자신의 신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Smith, 1778, p. 8)를 자유(liberty)의 자연권이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생산물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자본, 노동을 고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인류의 가장 신성한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Smith, 1776, p. 582). 실제로 식민지 규제정책은 모국 중심의 정치적 규제와 배타적 독점체제 구축을 통해 식민지의 정책적 자유의지를 저지하고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선시킬 기회를 박탈하였다. 그러므로 “모국의 배타적 무역은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 그리고, 특히 아메리카 식민지의 삶의 향유와 근로여건을 축소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자유교역의 수준보다 낮게 하는 경향이 있다. 무역독점은 인류의 사업의 대부분을 가동시키는 위대한 역동적 동기를 억누르는 압박이다”(Smith, 1776, p. 592). 두 번째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식민모국에 의한 식민지에 대한 산업규제는 (정의에 대한 위반인 동시에) 단기적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식민지의 산업과 제조업 발전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다.¹⁴⁾ 당시 북미 식민지의 산업구조에 관해 스미스는 실증적 관점에서 자본의 상대적 부족과 농업의 탁월한 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농업 기반 경제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Smith: 1776, p. 386, p. 609). 그러나 식민지 농업-식민모국 상공업과 같은 국제분업과 재생산체제를 강제하는 식민지 규제정책은 향후 경제발전에 따라 식민지의 농공업 생산력이 급속히 향상될 경우 식민지 산업의 발달을 억압 및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미스는 다음처럼 말한다. “식민지의 현재의 진보상태에서는 이 금지(정교한 제조품 생산금지)는 식민지의 산업 활동을 속박하지도 않으며, 그 사업이 식민지에서 저절로 창출 가능한 고용을 억제하지도 않지만, 그 금지조치는 어떠한 충분한 이유 없이 모국의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근거 없는 질투 때문에 식민지에 부과된 노예제(종속)의 무례한 상징에 불과하다. 보다 발전된 상태가 도래한다면 그 금지조치는 정말 억압적이고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Smith, 1776, p. 582). 세 번째로,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식민지의 정치가, 자본가, 주민들은 식민모국에 대해 적대감 표출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군사적 저항을 결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영국 통치에 맞선 미국의 독립선언처럼 결국 식민모국과 식민지 간의 전쟁으로 귀결되고, 무거운 조세와 공채 누증, 비생산적 지출로 이어져서 자본축적 파괴를 야기할 것이다.

3. 근대 유럽 식민모국의 성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식민지에 대한 규제정책의 의도는 주로 식민모국 시장의 확장과 경제성장이지만, 식민지 규제정책은 오히려 부의 원천을 취약하게 하고 번영을 저해하는 방법이었다. 스미스에 의하면, 총체적인 편익과 비용을 고려할 때 정치적 예측과 배타적 독점지향적인 식민지 경영방식은 식민지의 번영을 둔화시키고 억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식민모국의 부 그리고 주민의 소득증진에도 반하는 역할을 했다.¹⁵⁾ 식민주의와 독점 또는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스미스의 논거는 구체적으로

14) 그러므로 “중상주의의 다른 모든 비열하고 악의에 찬 편법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무역의 독점은 이익 도모를 위해 그 독점을 설정한 해당국의 산업을 조금도 개선시키지 않고 오히려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산업, 특히 주로 식민지의 산업을 억압했다”(Smith, 1776, pp. 610-611).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식민모국 역시 식민지와의 교역을 확대함에 의하여 무역의 일반 이익을 향유한 점은 분명하다고 한다. 먼저 신대륙과 구대륙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확장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새로운 물품의 소비와 향유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산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분업과 기술개발이 전개되고 임금과 소득이 증가하였다. 스미스의 표현에 따르면, “아메리카의 발견은 확실히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유럽의 모든 상품에 새롭고 무진장한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옛날 상업의 좁은 영역에서는 생산물의 큰 부분을 흡수할 시장의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분업과 기술개량을 야기했다. 노동생산력은 발전했고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생산물이 증가했으며, 그와 함께 주민들의 실질수입(收入)과 부가 증가했다. 유럽의 상품은 아메리카에서는 거의 새로운 것이었고, 아메리카의 많은 상품은 유럽에 새로운 것이었다”(Smith, 1776, p. 448).

둘째, 새로운 시장의 확대에 의한 부와 소득증가 현상은 긍정적 요인이었으나, 반면 식민지에 대한 무역독점으로 인해 분업구조가 왜곡되고 자본축적이 저해받은 점은 경제성과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식민지 무역 독점 정책이 시행되면서 유럽 인근의 직접무역에 투입되던 기존의 자본이 원거리 우회무역이나 중계무역에 투입됨으로써 분업구조의 자연적 균형이 파괴·왜곡되고, 자본축적을 방해하며 생산적 노동 고용력을 약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원격지 무역 의존도 제고에 따른 자본의 회전속도 저하, 농업에서 사용되는 생산자본의 회전속도 및 경제전반 확대재생산 속도의 둔화, 국내 공업의 원격지시장 의존도 심화에 따른 균형 발전의 방해 등이 성장에 걸림돌로 기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산업은 다수의 조그마한 시장들에 적응하는 것 대신에, 주로 하나의 큰 시장을 지향했다. 영국의 무역은 다수의 작은 수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대신에, 주로 하나의

15)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는 사실의 근저에는 무엇보다 식민지지배와 독점적 식민교역이 가져다주는 지배 특정 계층의 사적 이익(소득)의 추구 동기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Smith, 1776, pp. 616-617).

16) Hill and Clary(1990)는 스미스가 일관되게 견지한 일종의 반(反)식민지주의와 반(反)독점·보호주의의 원천을 전적으로 경제사적인 토대로부터 찾는다. 즉 이 같은 스미스의 독트린을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이 가져온 세계 최고의 경쟁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880년대 중반 이후 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라 제국주의(imperialism)가 재차 득세하게 되었다고 본다.

큰 수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독점이 없는 경우에 비해 영국의 산업과 상업 전체가 더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나라의 정치지형 전반이 덜 건강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Smith, 1776, p. 604).

셋째, 식민모국 주도의 식민지통치의 편익과 비용의 판단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전비 관련 재정지출이다. 식민지의 정치적 저항으로 인한 분쟁 및 전쟁 유발 내지는 방위를 위한 막대한 전비마련은 실제로 막대한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시민혁명 정신에 비추어 보면 정부에 의한 과세는 대표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과세였다. 따라서 제국의 방위비 부담을 위해 식민지에 과세를 하자면 식민지 주민도 의회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져야 했다. 하지만, 식민지 지배체제 하의 식민모국 국민의 교만한 자만심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결국 식민지의 정치적, 군사적 저항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 일부 식민모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민지에서 조세수입(收入)을 얻은 국가는 없었으며, 식민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지출이 초래되었다. 정치적 지배와 배타적 독점체제 유지를 위한 식민지 경영에서 초래된 이상과 같은 정황으로 인해 식민모국의 주민들과 소비자들은 전쟁 수행에 따라 폭증하던 조세와 공채의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아야 했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다음처럼 기술한다. “아메리카 및 서인도의 식민지 통치를 위해 정립된 법률체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무역규제에서보다 더욱 과도하게 국내 소비자의 이익이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되고 있다. 대제국은 오직 우리의 상이한 생산자들의 상점으로부터 이들이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재화를 사지 않을 수 없는 고객으로 만들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건설된 것이다. 이러한 독점이 우리 생산자들에게 부여하는 약간의 가격상승을 위해 국내 소비자들은 그 제국을 유지하고 방위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 이러한 국채[전쟁 수행 목적 발행국채]의 이자규모만 하더라도 식민지무역의 독점에서 취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전체보다 클 뿐만이 아니라, 식민지무역의 가치총액 또는 매년 평균적으로 식민지에 수출되는 재화의 가치총액보다 크다”(Smith, 1776, p. 661).

넷째, 중상주의 정책의 시행과 유럽 국가들 간의 식민지 확보 열기는 필연적으로 열강들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을 가일층 격화시켰다. 그러므로 “최근의 전쟁은 거의 식민지 쟁탈전이었으며, ... 1739년에 시작된 스페인전쟁은 분명히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그 전쟁의 주요한 목적은 남미의 북쪽 해안지방과 밀수무역을 수행하

던 식민지 선박이 검문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Smith, 1776, pp. 615-616)는 지적이 나온다. 식민지무역에 관한 독점정책과 자국 산업 및 무역의 상대적 우월성 확보 지향정책은 유럽 열강 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을 유발시킴으로써 국제정치에서 긴장관계 조성, 식민지쟁탈 전쟁 발발, 막대한 전쟁비용 증가, 조세 부담 증가 및 공채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대, 국민 저축 여력의 감소 등을 통해 생산적 노동력 고용의 저해 등을 초래하였다.¹⁷⁾

V. 식민지정책과 경제성장의 비교분석: 영국령 대 스페인령 식민지

1. 영국의 북미 대 동인도 식민지

1) 북미 식민지

근대 들어 영국과 스페인이 지배했던 미주(美洲) 식민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스미스의 분석, 평가, 대안 제시는 앞서 거론한 경제발전 이론체계 및 식민지정책에 대한 관점을 잘 반영한다. 스미스에 의하면, 유럽 국가의 식민지 중 영국의 북미 식민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훌륭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보다 더 빠른 경제 진보를 이룬 식민지는 없다”(Smith, 1776, p. 571). 영국령 북미 식민지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으며, 농업생산성이 증대하여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하였다. 영국의 북미 식민지도 미주 대륙의 여타 식민지들처럼 양질의 광대한 미경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에 비교해서는 토지의 비옥도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무역거래를 규제하는 중상주의적 정책 역시 시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식민지

17) 이러한 복합적 이유로 1770년대 중반 영국에서 북미 식민지와의 정치·경제적 관계설정과 관련하여 식민지 분리론에서부터 연방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었다(예컨대, Stevens, 1976, pp. 203-209). 이에 대하여 자발적 분리론이 당시 영국에 유리한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지만(Smith, 1776, pp. 616-617), 스미스는 향후를 고려하여 영국과 북미 식민지의 정치적인 합병(political union)을 제안한 바 있다(Smith, 1776, pp. 622-624, p. 933). 스미스는 “대표에 따른 과세”를 배태한 시민혁명의 정신, 수혜 정도에 부합하는 조세부담, 자유무역과 시장 확대에 따른 이익과 친애의 증진, 양 지역 주민간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유대감 등과 같은 여러 원리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차별대우 없는 합병이 (당시 북미 식민지 대표들의 중요성과 독립정신에 비추어 역시 유토피아적일지라도)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생각했다(예컨대, Skinner, 1996, pp. 218-221).

가 다른 식민지들에 비교해서 가장 탁월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정치 제도 및 문화의 우월성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스미스는 영국 식민지의 정치제도 그리고 모국으로부터 전수받은 문화적 유산이 정치적, 법률적, 정책적으로 자치권과 거래의 자유를 더욱 관대하게 허용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경제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 영국 식민지의 정치제도의 우위가 북미 식민지의 고도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영국 식민지의 정치제도”(Smith, 1776, p. 572)의 우월성, 즉 공화주의적인 정부통치 방식이 식민지 주민들로 하여금 자치, 평등과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어느 영국 식민지에도 세습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 현재의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식민지의회는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일부도 가지고 있었다. ... 그러므로 모국 거주자들보다도 식민지주민들이 더 평등하다. 그들의 풍속은 본국 주민에 비해 더 공화주의적이며, 그들의 정치, 특히 뉴잉글랜드의 세 개주의 정치도 지금까지 더 공화주의적인 성향을 지녔다”(Smith, 1776, p. 585).

둘째, 자유, 평등을 중시하는 영국 정치제도의 우월성은 식민지 법률의 특성과 운영상의 우위를 가져왔다.¹⁸⁾ 중상주의적 규제가 잔존한 무역영역을 제외한 분야에서 법률상 자유와 안전 및 평등을 보장하였다. “외국무역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영국 식민지 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자유는 완전하다. 그 자유는 모든 점에서 본국 시민의 자유와 동일하며, 식민지통치를 위해 과세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진 식민지의회에 의해 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Smith, 1776, pp. 584-585). 이와 동시에 “식민지의회의 권위는 행정권을 압도하며 아무리 천하고 미움을 사는 주민이라도 법을 준수하는 한, 지역의 주지사나 다른 문무 관료의 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영국하원처럼 언제나 국민을 완전히 평등하게 대표하지는 않을지라도, 식민지의회는 그러한 성격에 훨씬 더 가깝다. 행정권이 식민지의회를 매수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든, 아니면 모국으로부터 받는 원조 때문에 매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든, 식민지의회는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의향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Smith, 1776, p. 585).

18) 식민모국인 영국의 법제도 운영상의 우위에 대해서 다음처럼 요약한다. “영국의 진보와 변형은 다른 이유들에 의해 매우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영국의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안전보장, 즉 자신의 노동성과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은 온갖 불합리한 상업규제들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번영시키기에 충분하다”(Smith, 1776, p. 540).

셋째, 17세기 명예혁명 이후의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법을 존중하며 관용적인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북미 식민지의 통치를 훌륭하고 온건하게 하는데 기여했다.¹⁹⁾ 이는 식민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훨씬 관대하고 덜 억압적인 방식을 채택하도록 기여했다. “자국 식민지에 대해 유럽 각국이 행사한 정책에서 가장 본질적인 차이 중의 하나는 이러한 독점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들 중 최선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방식은 다른 나라의 정책보다 다소 더 자유롭고 덜 억압적이었다는 것뿐이다”(Smith, 1776, p. 590; 또한 Smith, 1776, p. 584).

스미스에 따르면, 이 같은 영국 식민지의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문화, 우월한 정치조직 및 제도가 북미 식민지 경제제도의 운영에 반영되어, 미경작지의 독점 제한, 장자상속권의 폐지와 토지 균등 분할, 저렴한 세금 및 행정방위비 부담, 타 식민지보다 더 큰 시장의 활용 등이 이루어졌다(Smith, 1776, pp. 572-575 참조).

2) 동인도 식민지

영국의 북미 식민지의 경제성과와는 대조적으로 동인도 식민지의 통치 및 그 경영성과는 매우 열악했다고 지적한다.²⁰⁾ 예컨대, 당시 북아메리카에서 주민의 수가 약 25년 정도의 기간에 두 배로 늘고 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불된 반면, 벵골과 동인도의 영국 식민지에서 관측된 현상은 노동자의 임금이 생물학적인 수준으로 감소하고 기아와 인구 감소가 만연했다는 점이다(Smith, 1776, pp. 87-91). 스미스는 이러한 대조적인 현상들을 식민지경영의 정치이념, 제도와 조직의 운영과 연관시킨다. “북아메리카를 보호하고 통치하는 영국 헌법의 이념과 동인도에서 억압하고 권세를 부리는 상인회사의 이념 간의 차이는 아마 두 나라의 상황 차이에 의

19) 통치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다음의 기술을 보라. “영국식민지의 통치는 매우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들에게 완전한 안전보장을 부여할 수 있었던 세계 최초의 유일한 것이다. 프랑스 식민지의 행정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행정에 비해 항상 더 부드럽고 온건하게 행해졌다. 이러한 통치방식의 우수성은 프랑스 국민성과 각국의 국민성을 형성하는 것, 즉 통치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통치는 영국의 통치에 비해 독단적이고 폭력적이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통치에 비해서는 합법적이고 자유롭다”(Smith, 1776, p. 586).

20) 식민지문제와 관련하여 고전파 경제학자인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는 식민지통치 및 동인도회사의 지배와 성과에 관한 스미스의 부정적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배타적 독점을 지향하는 상인회사에 의해 통치되기 때문에 “모든 정부 가운데 가장 최악”이라는 그의 주장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Pullen, 1994, pp. 247-249).

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Smith, 1776, p. 91). 그렇다면 동인도의 식민지 통치이념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상인회사에 의한 지배로서 정치적 권위가 결여되었던 식민지정부는 폭력적, 군사적인 수단에 의거한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매우 큰 통치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동인도회사는 속임수와 정복에 의하여 통치권을 획득하고 회사의 독점이윤 증대를 위해 통치권을 활용해 왔으며, 이러한 불의에 맞서 자연스럽게 동인도 주민이 반발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그 통치방식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전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스미스는 다음처럼 상세히 전한다. “유럽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와 같은 통치이념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고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것이라면, 인도에서의 행정이념은 더욱 그러하다. 이 인도행정부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상인협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이들은 매우 존경받을 직업을 지녔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위압적이기 때문에 강요 없이도 자발적인 복종을 낳게 하는 그런 유형의 권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상인협회는 군사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만 복종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는 필연적으로 군사적이고 전제적이다. ... 회사의 무역에 관한 한, 인도행정부의 이념은 본국 지휘부의 그것과 동일하다. 즉 통치를 독점의 이익에 봉사하게 하며, 따라서 인도의 잉여생산물 중 몇몇의 자연적 성장을 회사의 수요를 간신히 충족시키는 선까지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Smith, 1776, p. 638).

둘째, 식민지에 대한 통치와 외국과의 무역을 동일한 하나의 상인회사의 독점에 일임함으로써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분업구조의 왜곡이 초래되고 자본축적은 심히 저해되었다. 상기에서 거론한 바대로, 아메리카 식민지와의 무역처럼 일국(一國)에 의한 독점무역 역시 자본축적과 분업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러한 중상주의적 체계 하에서 더욱 부조리하고 최악의 후생효과를 낳는 독점 유형은 동인도무역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은 하나의 특허회사에 의한 지역통치와 무역독점이다. “독점적인 상인회사에 의한 통치는 아마 어느 나라의 어떠한 통치보다 나쁠 것이다. ... 이러한 통치가 식민지들의 발전을 보다 느리고 활기 없게 만들었다”(Smith, 1776, p. 570). 동인도회사는 독점이윤을 위해 잔혹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식민지산업의 통제는 물론 직접적인 파괴행위를 시도하였다. 스미스는 다음처럼 그 내용을 예시하여 적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의 회사들은 ... 동인도제도에서 상당한 정복을 달성했다. 그들이 새로운 식민지 주민들을

통치하는 방식에서 독점회사의 자연적인 특질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향료군도에서 네덜란드인들은 ... 자신들의 독점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 시장에 공급하는 규모보다 더 많은 향료가 재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영국회사는 벵골지역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한 파괴제도를 확립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계획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Smith, 1776, pp. 635-636).

셋째, 동인도에서 특허회사 및 개인들의 독점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자행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일종의 X-비효율성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초래되었다. 본국으로부터 동인도에 파견된 독점기업 직원들은 일종의 대리인으로서 경영부실과 태만, 낭비, 횡령 이외에도, 치부를 위한 사적 거래를 중시하고 이를 독점화하기 위해 정부권력을 행사하여 식민지와 모국의 발전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었다(Smith, 1776, pp. 638-641). 이에 대해 스미스는 다음처럼 거론한다. “영국 동인도회사의 설립 이래 영국의 다른 주민들은 그 무역으로부터 배제된 것 이외에도, 그들이 소비하는 동인도회사의 상품의 가격을 통해 동인도회사가 독점에 근거하여 취득한 모든 특별이윤뿐만 아니라, 거대한 회사의 업무 관리와 분리될 수 없는 사기와 남용이 필연적으로 야기한 과도한 낭비에 대해서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후자의 유형의 독점이 초래하는 불합리성은 첫 번째 유형의 독점의 불합리성보다 훨씬 더 명백하다”(Smith, 1776, p. 631).

2.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식민지

영국의 북미 식민지와는 달리, 상이한 정치적, 법률적, 문화적 전통으로 말미암아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스페인 및 포르투갈 식민지의 경우는 매우 대조를 이루는 사례를 구성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는 영국(유럽) 식민지들에 비해 풍부한 자원의 질과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비해 더욱 정체를 보이거나 극히 느린 속도로 성장했다. 스미스는 “스페인 식민지들은 영토의 크기에 비해 인구, 경제적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모든 기타 유럽 식민지보다 후진적인 것으로 사료된다”(Smith, 1776, p. 568) 고 지적한다. 이미 16-17세기경에 스페인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전쟁 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있었지만, 스페인의 중앙집권적, 관료적 정치조직은 영국과는 달리 세수 증대, 재산 몰수 등으로 대처하면

서 심각한 재산권의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정체의 경로를 겪었다. 유럽의 다른 식민지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및 포르투갈령 식민지에서도 중상주의적인 독점정책이 산업발전과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 효과를 낳았지만,²¹⁾ 그 무엇보다도 스페인의 정치 조직과 그 제도적 특성으로부터 계승된 족적이 아메리카 식민지의 경제성과를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스미스에 의하면, 멕시코와 페루 같은 스페인의 식민지에서는 본국의 전제정치와 이로부터 파생된 자의적 권력행사, 국왕을 위한 금은 확보정책 및 유럽 봉건제도의 일부 계승 등으로 말미암아 식민지 중에서 가장 우수한 토지자원을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제성장의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첫째, 국가통치의 차원에서 정치제도의 열악성이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봉건적이고 전제적이며 자의적인 정치제도는 행정의 자의성, 폭력성을 수반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 전제정부(absolute governments)는 식민지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그러한 정부가 매우 먼 거리 때문에 하급관리들에게 위임한 자의적 권력은 자연스럽게 일상적 수준을 넘어 상당히 폭력적으로 행사된다”(Smith, 1776, p. 586).²²⁾ 또한 스페인 식민지에서 시행된 봉건적 제도(예: 마조라초(Majorazzo), 즉 1인 한사상속과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는 토지제도)도 성장을 제한했다(Smith, 1776, p. 572 참조).

둘째,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법제도와 공공정책이 야기한 부정적 요인이 식민지의 성장을 상당 부분 가로막았다. 스미스에 의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통치체제 하의 사법의 집행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따라서 상호 교환 및 시장의 확대를 저

21) 스미스는 스페인 및 포르투갈이 다른 나라보다 더 규제가 강화된 방안을 모색했으며, 예컨대 모국의 특정 항구를 통해서만 식민지무역을 담당하도록 했다고 기술한다(Smith, 1776, pp. 575-576). 또한 그는 중상주의적인 무역독점 정책이 제조업 발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인구 및 부가 번영일로에 있던 식민지의 무역독점이 그 자체로서는 제조업을 확립하거나 심지어 유지하는 것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실례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이 두 나라는 대규모 식민지를 보유하기 전에는 공업국이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비옥한 식민지를 보유하게 된 이후에, 두 나라 모두 공업국이기를 멈추었다”(Smith, 1776, p. 609).

22) 일반적으로 “폭력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서는 퇴장화폐를 가까이에 지니고 있는 것이 편리했다.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에 대비해 어떤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는, 통용되는 가치를 보유하려고 했던 것이다. ... 미개한 사회상태에서는 거대한 상공업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축할 수 있는 화폐를 모두 퇴장시키며 그 퇴장화폐를 은폐하는 개인들은 정부의 사법에 대한 불신, 그리고 화폐퇴장 및 퇴장장소가 알려지는 경우 즉시 약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Smith, 1776, p. 908, p. 911).

해하는 불확실성을 크게 조장하였다. “그 다른 무엇보다도, 불규칙하고 편파적인 사법(司法)이 그 원인이 되었다. 즉 이 사법적 관행은 침해당한 채권자의 고발로부터 부유하고 권력을 지닌 채무자를 종종 보호했으며, 근면한 국민들로 하여금 이를 거만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소비를 위해 상품을 만들기를 두려워하게 했다. 이는 그들에게 감히 외상판매를 거절할 수가 없었지만, 그 환수 여부가 거의 불확실한 상황에 기인했다”(Smith, 1776, p. 610).

셋째, 식민지의 후진적이고 열악한 사회·문화적 요인 역시 영국의 북미 식민지와는 대조적으로 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수반했다. 신념체계, 이념, 관습, 종교적 태도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대안과 비용에 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력의 차이를 수반하고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²³⁾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권위주의적, 관료적 사회문화적 경험과 종교적 신념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거래의 비용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적대적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권력자들은 그들의 식민지에 부과한 세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다. ... 이 [프랑스를 포함한] 세 나라의 식민지 통치는 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계획 하에 집행되며, 또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기념행사들이 거행된다. 예를 들어, 페루의 신임 총독 환영행사에 지출되는 비용은 종종 엄청난 금액에 이른다. ... 이 세 나라의 식민지에서 종교적 통치 역시 극히 억압적이다. 그들의 모든 지역에서 십일조가 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부과된다”(Smith, 1776, p. 574).

VI.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근자의 스미스 관련 주요 연구들은 그의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비전과 대안제시

23) 스미스는 이런 맥락에서 다음처럼 적고 있다. “영국은 분명히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의 하나이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마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 두 나라에서는 이 나쁜 정책[금은수출에 대한 과세 및 금지정책]이 국민의 전반적인 자유와 안전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노동은 자유롭지도 안전하지도 않으며, (현재 불합리한 그들의 상업규제가 과거에 현명했었다라도) 문명행정 및 종교적 통치방식은 양국의 현재의 빈곤상태를 영구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다”(Smith, 1776, p. 541).

에 관한 분석에서 사회, 국가와 법, 경제 등 세 가지 사회구성영역을 중시한다. 이 같은 통섭형 분석 틀로 보았을 때, 스미스의 주요 관심과제인 경제발전의 문제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법률적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와 규범, 문화 수준 등 다차원의 통합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된다. 즉, 법과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괄하는 사회과학적 통합된 틀 속에서 경제사(經濟史)에서 나타나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현상이 조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성장의 메커니즘은 통상적으로 자본축적, 분업, 기술진보 등 주요 공급측 요인들과 일부 수요측 요인이 작용하여 임금상승, 인구증가, 농업생산성 향상, 제조업의 확장, 상업의 팽창 등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경제의 선순환과 사회적 후생의 개선은 인간 내면의 도덕감정의 작용으로부터 승인된 정의와 자유, 안전, 평등과 같은 자연법(自然法)적인 사회적 가치가 국가 실정법체계의 운영에 법원리로서 반영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자본축적의 원천이 되는 경제적 요인의 작동은 국가법제도 운용의 여러 핵심 원칙과 가치의 구현 여부에 의존적이며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와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후생의 개선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처럼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가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있음을 거론하는 근자의 연구성과들에 기초하고 있다. 스미스와 식민지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대비하여, 본 연구는 도덕판단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사회적 가치규범과 문화적 요인 그리고 이에 근거한 법과 경제가 통합적 틀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1770년대에 스미스가 상당히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식민지통치와 정책에 관한 기술, 분석, 비평, 대안제시 내용을 차별화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스미스는 식민지관계 형성에 의한 선진 제도와 지식의 유입,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식민지와의 무역의 성립과 그 규모의 확장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생산적인 노동 분업의 실현 및 기술개발을 통해 교역 국가들에게 상호 이득을 가져다주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근대 유럽의 식민지관계를 사회-정치-경제학적 차원에서 총체적·전면적으로 평가할 때, 당시 북아메리카와 유럽 및 동인도, 그리고 중국, 인도, 일본 간의 무역은 당해 모든 교역 국가들과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즉, 식민지관계에서 잠재적 발전기회의 훼손은 본원적으로 당시 식민지관계와 정책체계가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사회적 가치와 법제도 운용원칙에서 일탈한 점에 기인한다. 그리고 식민지 영토를 군사적으

로 지배하고 교역 독점권을 무력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방비용의 누증이 있는 경우 사회적 후생의 손실은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동인도회사처럼 (자유·평등의 사회적 가치의 정책적 반영 대신에) 군사적·폭력적 방식에 의한 식민지통치와 무역 독점권을 동시에 지녔던 상인회사는 권력의 악용, 대리인 문제와 조직상의 비효율까지 유발함으로써 모국경제에 손해를 끼침은 물론 식민지 속국도 황폐화시켜 장기적인 상호 발전적 교류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2. 식민지관계-근대화 평가를 위한 시사점

본 연구는 스미스의 문헌에서 그의 경제발전 이론체계에 부합하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로서 당시 식민지관계에 관한 평가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스미스의 경제발전 이론체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상 경제의 흥망성쇠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이론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거대이론(grand theory)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스미스의 이론체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초중반에 걸쳐 전개된 조선의 멸망과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겪고 변화해 온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경로와 내용을 해석·평가하는데 유효한 하나의 분석틀과 잣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²⁴⁾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일제 강점 식민지기 조선에서 일어난 자

24) 이 시사점에 관한 논의는 스미스 이론체계의 전면적·객관적 타당성을 전제로 하여 그 이론이 규범적 차원에서 모든 발전현상의 토대가 되며 또한 근대화 경로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론적·경험적 측면의 정합성, 현실설명력, 예측력을 두고 경합하는 기존의 다른 발전이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연구프로그램(research program)의 가능성에 관한 제안이다. 실상 오늘날 경제학계 및 사회과학계의 주요한 발전이론, 예컨대 마르크스주의이론, 근대화이론, (베버식의) 문화이론 등은 학문적 진리의 완결버전으로서보다는 그 잠재적 적실성에 대한 학자들의 신념 때문에 수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연구에서 메타이론적으로 필연성(necessity)에 입각한 마르크스주의 발전이론이 고전적 생산양식론 이외에도 비(非)서구의 저발전의 문제와 관련하여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생산양식 접합론 등 정치·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변종이론을 낳았고, 다차원적이고 비(非)결정론적인 포스트-마르크스주의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Brewer, 1980; Booth, 1994). 한편, 주류경제학계 근대화이론의 하나인 노스(Douglass North)의 경제사이론 역시 장기적 경제성과를 설명하는 과제에 직면하여, 초기에 결정론적인 가격이론으로부터 출발했고 사회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국가론을 접목시킨 바 있으나, 근자에 (스미스의 이론체계와 유사하게) 신념체계, 종교적 교의, 문화 등 사회적 층위(social arena)의 구성내용이 적응적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또한 강조하는 비결정론적인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North, 2005, pp. 136-145).

본주의의 전개와 해방 후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간에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한국사학계와 일부 경제사학자 간의 논쟁은 다소 일원론적인 시각의 역사 이해를 지양하고 상호 소통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기준(및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²⁵⁾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경제사학자들은 주로 경제학적인 발전이론 틀을 견지하고 (국가) 제도와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실증적 관점에서 일제 식민지기와 해방 후의 근대화를 조명해 왔다. 하지만 스미스가 제시한대로 중장기적인 경제성과가 외부세계의 또 다른 층위인 정치적·사회문화적 영역의 요인들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좌우된다면, 보다 합당한 역사적 평가와 그 재구성을 위해서는 일원론적 접근과 해석보다는 다차원적·통합적 해석 및 성과분석이 불가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합리적인 역사 재평가는 조선에 대한 일제 식민지통치가 경제개발에 미친 영향은 물론, (그 속성상 수치화된 또는 통계화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과 제약에서 비롯되지만) 정치적·법제도적 관점에서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상태가 구현되거나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조선인의 의식과 일상생활 속에 협력, 공정성, 신뢰, 상호성, 신중함 등의 사회적·공동체적 규범과 가치가 배양되거나 강화되었는지 등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고 그 내용과 성과를 종합하는 과제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김광수, “애덤 스미스의 법과 경제: 정의와 효율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57집 제1호, 2009, pp.120-140.

25) 한국 역사학계에서 전개된 식민지 근대화 논쟁 이후 변증법적 관점에서 역사적 재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요청은 정연태(2000), 식민지 근대화론에 관한 소개 및 비판은 박섭 외(200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김낙년(2007)은 (이론적 근거를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근대적 현상 연구를 위한 학문간 상호보완을 강조하면서, 식민지 경제, 지배체제, 사회문화의 각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소개하고 소통과 종합을 촉구하고 있다.

- (Translated in English) Kim, Kwangsu, "Adam Smith's Law and Economics with Reference to Justice and Economic Efficiency," *Kyong Je Hak Yongu*, Vol. 57, No. 1, 2009, pp.120-140.
2. _____, "애덤 스미스와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 『경제학연구』, 제58집 제2호, 2010, pp. 5-36, 한국경제학회.
(Translated in English) Kim, Kwangsu, "Adam Smith on Law and Economics of Labor Issues," *Kyong Je Hak Yongu*, Vol. 58, No. 2, 2010, pp. 5-36.
 3. 김낙년, "식민지근대와 재론," 『경제사학』, 제43호, 2007, pp. 155-188, 경제사학회.
(Translated in English) Kim, Nakneon, "Reconsideration of Controversy on Colonial Modernization in Korea," *Kyong Je Sa Hak*, Vol. 43, 2007, pp.155-188.
 4. 박 섭 외,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 백산서당, 2004.
(Translated in English) Park, Seop, et al., *Understanding and Critique of Controversy on Colonial Modernization in Korea*, 2004, Seoul: Baksan-seodang.
 5. 정연태, "21세기의 한국근대사 연구와 신근대사론의 모색," 『20세기 역사학, 21세기 역사학』, 2000, pp.125-163, 역사비평사.
(Translated in English) Jung, Yeontae, "Exploring a New Way of Thinking in the Study on Modern History of Korea," *The 20th and 21st Century Studies on History*, 2000, pp. 125-163, Yoksa-Bipyongsa.
 6. Bell, D., "John Stuart Mill on Colonies," *Political Theory*, Vol. 38, No. 1, 2010, pp. 34-64.
 7. Benians, E. A., "Adam Smith's Project of an Empire," *Cambridge Historical Journal*, Vol. 1, No. 3, 1925, pp. 249-283.
 8. Berry, C.J., "Adam Smith: Commerce, Liberty and Modernity," in P. Gilmour (ed.), *Philosophers of the Enlightenment*, 1989, pp.113-132, Edinburgh University Press.
 9. Booth, D., *Rethinking Social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Essex: Longman, 1994.
 10. Brewer, A., *Marxist Theories of Imperialism: A Critical Surve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11. Brown, M., "Free Enterprise and the Economics of Slavery," *Real-World Economics Review*, Vol. 52, 2010, pp.28-39.
 12. Bruni, L. and R. Sugden, "Moral Canals: Trust and Social Capital in the Work of Hume, Smith and Genovesi," *Economics and Philosophy*, Vol. 16, No. 1, 2000, pp. 21-45.
 13. Campbell, T.D., *Adam Smith's Science of Morals*, London, Allen & Unwin, 1971.
 14. _____, "Adam Smith and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in V. Hope (ed.), *Philosophers of the Scottish Enlightenment*, 1984, pp.133-156, Edinburgh University Press.
 15. Coats, A.W., "Adam Smith and the Mercantile System," in A.S. Skinner and T. Wilson (eds.), *Essays on Adam Smith*, 1975, pp. 218-236.
 16. Danford, J., "Adam Smith, Equality and the Wealth of Sympath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4, 1980, pp.674-695.

17. Evensky, J., "Adam Smith's Lost Legacy,"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67, No. 3, 2001, pp.497-517.
18. _____, *Adam Smith's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9. Goodacre, H., "Limited Liability and the Wealth of 'Uncivilised Nations': Adam Smith and the Limits to the European Enlightenment,"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34, No. 5, 2010, pp.857-867.
20. Guiso, L., P. Sapienza and L. Zingales, "Does Culture Affect Economic Outcom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0, No. 2, 2006, pp.23-48.
21. Haakonssen, K., *The Science of a Legislator: The Natural Jurisprudence of David Hume and Adam Smi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22. _____, *The Cambridge Companion to Adam Smi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3. Hill, L.E. and B.J. Clary, "Adam Smith on Colonies: An Analytical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Forum for Social Economics*, Vol. 19, 1990, pp.45-54.
24. Kim, K., "Adam Smith's Theory of Economic History and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16, 2009, pp.41-64.
25. Koebner, R.,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26. Lieberman, D., "Adam Smith on Justice, Rights, and Law," in K. Haakonssen (ed.), *Cambridge Companion to Adam Smi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7. Malloy, R.P., "Invisible Hand or Sleight of Hand? Adam Smith, Richard Posner, and the Philosophy of Law and Economics," *The University of Kansas Law Review*, Vol. 36, 1988, pp.209-259.
28. _____, "Adam Smith and the Modern Discourse of Law and Economics," Malloy and Evensky (eds.), *Adam Smith and the Philosophy of Law and Economics*, 1994, pp.113-150, Kluwer Academic Publisher.
29. McClelland, P.D., "The Cost to America of British Imperial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1969, pp.370-381.
30. Muller, J., *Adam Smith in His Time and Ours*, New York: The Free Press, 1993.
31. Negishi, T., "Adam Smith and Disequilibrium Economic Theory," Vivienne Brown(ed.), *Adam Smith Review*, Vol. 1, 2004, pp.30-39, Routledge.
32. Nicholson, J.S., *A Project of Empire*, London: Macmillan and Co, 1909.
33. North, D., *Growth and Welfare in the American Past: A New Economic Histor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6.
34. _____,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s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35. Posner, R.A., "Law and Economics is Moral," Malloy and Evensky (eds.), *Adam Smith and the Philosophy of Law and Economics*, 1994, pp.167-177, Kluwer Academic Publisher.
36. Pullen, J.M., "Malthus on Colon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 Comparison with Adam Smith," *Utilitas*, Vol. 6, No. 2, 1994, pp.243-266.

37. Rasmussen, D. C., "Rousseau's 'Philosophical Chemistry' and the Foundations of Adam Smith's Thought,"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Vol. 27, 2006, pp.620-641.
38. Reid, G. C., "Disequilibrium and Increasing Returns in Adam Smith's Analysis of Growth and Accumulatio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19, 1987, pp.87-106.
39. Richardson, G. B., "Adam Smith on Competition and Increasing Returns," in A. S. Skinner and T. Wilson (eds.), *Essays on Adam Smith*, 1975, pp.350-360.
40. Rothschild, E., *Economic Sentiments: Adam Smith, Condorcet, and the Enlighte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41. Rothschild, E. and A. Sen., "Adam Smith's Economics," in K. Haakonsse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Adam Smith*, 2006, pp.319-365.
42. Salter, J., "Adam Smith on Feudalism, Commerce and Slavery,"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Vol. 13, 1992, pp.219-241.
43. Skinner, A. S., "Adam Smith and the American Economic Community: An Essay in Applied Economics,"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7, 1976, pp.59-78.
44. _____, *A System of Social Science*, Clarendon Press (2nd ed.), 1996.
45. Smith, A.,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dited by D. D. Raphael and A. L. Macfie (Glasgow Edition; 1976), Clarendon Press, 1759.
46. _____, *Lectures on Jurisprudence*, edited by R. L. Meek, D. D. Raphael, and P. G. Stein (Glasgow Edition), Clarendon Press, 1978.
47. _____,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ited by Campbell and Skinner (Glasgow Edition, 1976), Clarendon Press, 1776.
48. Stevens, D., "Adam Smith and the Colonial Disturbances," in A. S. Skinner and T. Wilson (eds.), *Essays on Adam Smith*, 1976, pp.202-217.
49. Werhane, P. H., *Adam Smith and His Legacy for Modern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50. Wight, J. B., "Adam Smith on Instincts, Affection, and Informal Learning: Proximate Mechanisms in Multilevel Selection," *Review of Social Economy*, Vol. 67, No. 1, 2009, pp.95-113.
51. Winch, D., *Classical Political Economy and Colonies*, London: Bell and Sons, 1965.
52. _____, *Adam Smith's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53. Young, J., "Adam Smith and New Institutional Theories of Property Rights," in Vivienne Brown (ed.), *Adam Smith Review*, Vol. 3, 2007, pp.48-68, Routledge.

Adam Smith on Colon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Kwangsue Kim*

Abstract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Smith's view of colonial relationship and policy in respect of economic progress. Smith applies to colonial problems in the 18th century his theories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have three dimensions of society, polity and economy. In Smith's view of development, political, legal and cultural factors as well as economic forces such as the division of labor and technical advance affect economic progress and interact over time. In this vein Smith stresses that the moral and social principles of justice, liberty, security and equality are critically fundamental in understanding the secular performance of an economy, and that social and economic welfare of a nation increases in case a set of laws based on those principles is properly set up and enforced. This story may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a historical study of Japanese colonial rule over Korea.

Key Words: Adam Smith, colonial policy, economic development

Received: Feb. 28, 2011. Revised: March 15, 2011. Accepted: April 27, 2011.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Myongryun-dong 3-ga, Jongno-gu, Seoul 110-745, Korea, Phone: +82-2-760-0437, e-mail: glaskim@skku.edu